

우리학교 의대생 98% 휴학 참여...일각서 방식의 적절성 지적되기도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우리학교 의과대학(의대) 학생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2학기부터 전국 40개 의대와 함께 ‘동맹휴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학생회는 지난달 19일부터 5일간 동맹휴학에 참여할 학생들의 휴학계를 접수받았다. 휴학 기간은 1년이다. 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번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우리학교 의대생은 지난달 31일 기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521명(의대 정원 528명)에 달하며, 의사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포기한 학생은 89명(국시 응시 정원 95명)이다.

이번 동맹휴학에 따라 2학기 의대 수업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강준구 의대 행정과장은 “학생들이 끝까지 동맹휴학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수업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휴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대학본부와 해당 사안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의대 교수들도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사들의 땀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4대 의료 정책 졸속 추진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유관단체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배제하고 누구와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 의료 정책을 즉각 철회



지난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결기대회'에 참여한 의대생과 의사들이 여의대로를 메우고 있다.

(사진=시위참여자 제공)

회하고 의료계와 협의 하에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단 한 명의 학생, 단 한 명의 전공의, 단 한명의 전임의도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 학생회가 휴학계를 접수받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학생회는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명단을 의대 학생이라면 모두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는 휴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과 재학생 A 씨는 “다수의 학생들이 휴학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대 학생회가 공개하는 동

맹휴학 참여인원 명단을 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 나도 휴학해야 하나’하면서 마음을 졸인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예과 재학생인 B 씨는 “모두 하나가 되어 뭉쳐야 한다는 의대 내부 분위기가 휴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하면 순식간에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며 “휴학에 참여하는 사람 명단을 공개하니 어쩔 수 없이 휴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대 이의주(의학과 2017) 학생회장은 “휴학원서를 수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누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회장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

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명단 공개를 통해 휴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며 휴학원서 제출 명단을 24시간 동안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학원서 제출 명단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한참 못 미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어 4대 의료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학교육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비인기 진료과목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16일 국시응시자대표 회의를 열고 1일로 예정되었던 국시에 대한 응시거부를 의결했으며, 다음날인 17일 대의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40개 의대의 동맹휴학을 의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지난 28일 기준 전국의 국시 응시생 3,172명 중 2,823명(89% 상당)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전국 의대 학생 14,000여 명이 동맹휴학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1일로 예정되었던 국시 실기시험을 8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대협은 의료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시 거부 단체인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4대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협의가 최대집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의대협 의료정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거부 유지를 두고 국시 응시자대표 40인, 대의원 40인으로 이뤄진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캠퍼스 구성원도 의료혜택 받는다... 녹산의료재단과의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돼

허지영 기자 krjy000224@khu.ac.kr

【국제】 지난 19일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가 녹산의료재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에 국제캠 구성원은 녹산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제캠 구성원에 대한 의료 혜택은 녹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동수원병원과 동수원한방병원에서 제공된다. 국제캠 외국인 학생을 포함

한 재학생,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의료 혜택 대상이며, ‘장례식장 사용료’ 50%, ‘비급여 진료비’, ‘종합건강검진비’ 20%,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비급여 감면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 한한다.

녹산의료재단은 1984년 2월 경희의료원과 자매결연을 한 뒤로 동수원한방병원과 동수원남양병원을 차례로 개원하였다. 이후 수련의 과정, 교수초빙, 협진 등으로 경희의

료원과 꾸준히 교류해온 기관이다. 녹산의료재단의 변영훈 이사장 역시 우리학교 의과대학 동문 83학번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학교와의 다양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힘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학교와 녹산의료재단은 의료혜택뿐 아니라 사회 공헌 사업 추진, 구성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학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의 다양한 면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기간은 2년으

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우리학교 대외협력처는 “기존 의료 협력을 진행해온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국제캠퍼스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캠퍼스에 많은 이공계 연구생이 상주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상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했다”며 “외국인 구성원 또한 의료기관의 영어 서비스와 체계화된 진료비 청구

프로세스 등을 제공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협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캠퍼스 구성원이 동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 절차 편의와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력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확대, 비상 의료체계 구축, 종합병원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발전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